

# 외자유치 최근 10년 실적 '최하위'

### 김동구 도의원,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 행감서 "전국 대비 0.5%에 그쳐... 강원·전남보다 낮아 실적 부진이 지리적 여건 때문만은 아닌것 같아"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전북의 FDI, 즉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은 집계해보면 총 6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1,284억 달러 중 0.5% 수준

김 의원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는 제외하더라도 강원, 전남, 경남도 전북보다 투자유치 실적이 높다"라면서 "결과만 놓고 보면 전북의 투자유치 실적 부진이 단순히 지리적 여건이나 입지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김동구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투자도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데 전북도의 자금지원책은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외자유치 실적이 벌써 수년째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실적이 전국 꼴찌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4일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전북의 외자유치 실적이 전국 대비 0.5%에 그쳐 도단위 광역자치체 중에서 가장 꼴찌를 기록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거 5~6년 전보다 2018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외자유치 실적이 훨씬 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에 그쳤다. 반면에 전북도와 인구경제학적으로 비슷한 강원도는 0.9% 충북 1.0% 충남 3.8% 전남 0.9%의 실적을 올렸고, 이밖에 경북이 3.8%, 경남 0.8%, 제주도가 3.4%에 기록했다.

## 협치 성과 제고 위해 정무수석 역할 강화돼야

### 김정수 도의원, 행감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 의원이 14일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의 협치 성과

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수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취임과 함께 기존의 정무부보를 정무수석으로 개편했고, 이에 따라 도와 의회 간의 협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기능적 측면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고, 최근에는 정무라인이 상실됐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의원은 최근 진행되었던 신입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자인 사칭문화를 그 예로 들며, "도의 정무라인이 사전에 적절하게 의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이 정도의 파행까지는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김정수 의원은 "정무수석은 도와 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도 정무라인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자리"라며, "최근의 사태를 비교하면 도민들의 우려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수석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각종 우려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수 기자

## "에코르 3단지 아파트 유지·관리 문제 있다"

### 윤수봉 도의원, 전개공 행감서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은 14일 열린 전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르 3단지 아파트의 유지·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입주인 237명은 에코르 3단지 사용검사승인 및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완주군 전북개발공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윤수봉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감독이 소홀해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해주지 않아 결국 주민들께서 전라북도에 감사까지 요청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공공부문 하자 257건을 점검한 결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은 64건, 하자발생시점이 불명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58건, 시공사 하자보수 처리사항 및 하자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63건 등 총 185건의 하자가 지적됐다. /김경수 기자



내년 전북도 예산 편성 제안 브리핑 1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3년 도 예산안 편성 제안 브리핑에 김동구 도지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뢰 향상 대책 시급"

### 김이재 도의원, 행감서 "점검 결과 도내 대부분 센터가 지적사항 다수 발생"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더불어민주당, 전주4) 위원장이 14일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체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 센터가 지적사항이 발생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이재 의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중점 기관으로, 올 한해에도 약 4만 8천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최근 2년간 점검 결과를 보면, 도내 대부분

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제출한 자료 상 지난 2021년 점검 결과 전주시 센터를 제외한 모든 센터가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2022년은 전주시

와 남원시 센터를 제외한 모든 센터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가족상담 부당 지급, 미공고 지원 체중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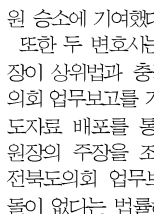
이후 김이재 의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힘든 청소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기관임에도 복무와 관련된 각종 지적사항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는 곧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기에 센터의 복무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수 기자

##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국민 위해 헌신"

### 두세훈 변호사, 민주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두세훈 변호사(전 전북도의원)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원 승소에 기여했다. 또한 두 변호사는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상위법과 충돌을 이유로 전북도의회 업무보고를 거부할 때 도의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전북도의회 업무보고가 상위법과 충돌이 없다는 법률해석을 명확히 논증했다.

한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공동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 양부남 전 부안고등검찰청 검사장)는 정치탄압 등 당 관련 법률적 사안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태원 참사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각급 위원회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두 변호사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별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완주군 읍·면 마을 변호사, 전주지방검찰청 국민소통음부서관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맹활약하는 등 법률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에 합류했다는 평이다.

두 변호사는 "시행령 통치 등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도전받는 엄중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원회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아계가 무겁지만 김승원·양부남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법률전문성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임명소감을 밝혔다.



한편 두세훈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완주군 개업변호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봉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장, 소양중학교 운영위원장, 최연소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했다. /김경수 기자



김동원 전 국회의원과 일부 남원시민들이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현 남원시장 검총 직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의혹 제기

### 학사 허위학력 혐의 불기소 관권 강동원 전 의원·일부 시민들 '규탄'

최경식 남원시장의 학사 허위학력 혐의가 불기소된 것에 관해 검찰총장 직무대리 출신인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리 출신인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남원시민들은 "지난 10월 18일,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혐의'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불기소 처분 이후,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검찰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최경식 시장은 한양대학교 4년제 정규 학사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없다"며 "최 시장이 공표한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경식 남원시장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미려대학교교육원을 졸업한 것이다"

며 "검찰이 주장하는 학점은행제에 따른 법 인용은 일반상식과 다른 결정이다"고 검찰 측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강동원 전 국회의원은 이러한 검찰측의 결정에는 지난 6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의원은 "10월 초 조남관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남원지청장과 수사담당 검사를 만난 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명백한 전관예우를 통한 불기소 처분이다"고 역설했다.

강 전 의원은 "현재 불기소처분에 따라 고발인은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다"며 "공소시효가 15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광주고등검찰청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의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측근 기소

### 전주시검 남원지청, '여론조사 조작 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과 측근이 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시검 남원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3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타지역 선거구인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 주소를 장수군으로 허위 이전한 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2회 이상 응답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후신 군수를 비롯한 장영수 전 군수의 가족과 측근이 모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장 전 군수의 지지자들은 공천배제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는 최군수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내경선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특정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구조를 악용, 타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지인을 경선 투표에 참여시키는 병행 수법을 밝혀 기소한 사례라고 전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장수군은 유권자가 약 1만8000명 정도로 비교적 적어 73명 정도의 허위 유권자만 확보해도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다"며 "이 사건에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부정하게 투표한 횟수만 43회에 달하고, 조사 결과에서 1, 2위 후보의 표 차이가 78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검찰은 경찰 선관위와 적극 협력해 유사 사례를 엄단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 농식품부, 내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 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흥농지·국·공유지 등을 매입해 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며,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대상으로 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

며, 1개소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1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오는 1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스마트팜 영농, 농업포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올 연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